

장애 남편·필리핀 아내, 차가운 방바닥서 숨진 채 발견

# 그들에겐 너무 먼 사회안전망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남편과 그를 돌보던 필리핀인 아내가 주위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된 이들 다문화 부부에게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은 너무 멀기만 했다.

7일 광주남부경찰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남구 주월1동 한 주택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남편 A(63)씨와 필리핀 출신의 아내 B(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남구노인복지관 소속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 직원은 지난 1일부터 A씨 부부 집에 설치해 놓은 활동감지 센서의 움직임이 없자 자택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이들 부부는 주택 내 9.9㎡(3평) 남짓한 안방 바닥에 얼트린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내가 먼저 뇌출혈로 쓰러졌고, 거동이 어려운 남편이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침대에서 떨어진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집은 난방이 끊긴 지 오래였고, 침대 위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 추위를 버텨왔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

안방서 뇌출혈로 아내 쓰러지자 이불 덮어주려다 침대서 떨어져 뇌병변 남편도 저체온증 사망 활동감지센서 등 191가구 설치 남구 모니터링 요원은 1명 뿐

1일부터 움직임 포착 안돼 담당직원 문자 보냈지만 답 없어 주말 지나 6일 집 방문해 발견

병변 장애 등 중증장애를 입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28일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 부부에게 쌀 10kg과 라면 1박스를 지원할 때 마주친 것이 공무원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날만 해도 A씨 부부는 밝은 모습으로 웃으며 공무원을 반겼다고 한다.

부부 집 안에는 자치구에서 설치해 준 활동감지 센서가 있었지만, 이들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다.

남구는 지난해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191가구에 7600여만원을 들여 게이트웨이형 전화기와 화재감지기·가스감지·활동감지센서 등이 장착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설치했고,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활동감지 센서에 이들 부부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담당 직원은 지난 2일 문자를 보낸 뒤 답이 없자 주말이 지난 6일에서야 A씨 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남구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91가구에 설치했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1명뿐인 탓에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모니터 요원은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계가 고장 나면 수리까지 도맡아야 했다. 특히 2014년에 제작된 기계는 노후화되고 2G 통신망을 사용, 응급 알림이 끊기는 현상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중"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이주노동자 선원 "한달 내내 새벽 1시30분~밤 10시 일했다"

전남지역 63명 대상 설문조사 폭언·폭행·노동착취 시달려

전남지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다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노동 착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센터 어필, 익산 노동자의 집 등으로 구성된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7일 서울 종로구 걸스카우트빌딩에서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진영 어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한 섬에서 이주 노동자 등 선원 6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4명(70%)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고, 대부분의 선원(92%)이 휴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숙소가 당연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선원도 많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은 면담에서 "한 달 내내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다"며 "겨울 북극에는 새벽 5시부터 26시간을 잠도 못 자고 일한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선원법 등 현행 법령이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임금 및 재해보상에서도 이주 선원에 대한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이주 노동자 선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구금' 상태에 처해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천이주민지원센터의 마리 솔리나 수

녀는 "고용주가 선원을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이나 무인도에 살도록 하는 경우 주인 허락 없이 육지로 나올 수가 없다"면서 "가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이 전혀 없는, 보이지 않는 구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보증금을 받거나 임금체납을 고의로 허거나 신분증·통장을 압수하는 수법이 흔하게 쓰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노동 착취의 목적으로 사기·기망·권한 남용·취약한 지위 이용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이동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라고 한다"며 "이주 선원들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거의 인신매매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올해 꼭 금연 성공 해야지~" 7일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주민들이 폐활량과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통해 금연성당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40주년 5·18, 전국화·세계화 움직임 분주

기념행사위 슬로건·엠블럼 공모 공동상임위원장도 10명 내외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40주년을 맞아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5·18 행사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의 수를 늘리고, 제40주년 기념행사 슬로건과 엠블럼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위는 39주년인 지난해에는 서울(김상근 목사)·부산(김재규 전 부산 민중항쟁 기념사업회 이사장)·광주(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었던 공동상임위원장 자리를 40주년인 올해에는 대폭 늘려 10명 내외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행사위는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 10여 명을 상임위원으로 모시고, 각계의 원로들을 고문단으로 추대해 40주년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로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40주년 기념행사 상임위원장은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한명만 선임돼

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올해 과제가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3배 가량의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며 "지선 스님(민중화 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신부(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이사장), 양조훈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박석은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을 추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대되는 공동상임위원장은 오는 2월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9월 30일 까지다.

행사위는 또 5·18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주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정신을 담은 한글 문구 20자 이내 간결한 구호인 슬로건과 시각적 이미지인 엠블럼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인당 3점까지 공모할 수 있다. 당선작에는 각 100만원(슬로건)과 300만원(엠블럼)이 주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간부 교육부, 중징계 통보

교육부가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간부를 중징계하고, 인사자들의 채용도 취소할 것을 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병원 측에 전 사무국장 A씨를 중징계하고, 그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서 A씨 등이 조카의 서류와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만점을 주고, 아들이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을 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채용비리 의혹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민간공원 특혜 의혹' 정종제 부시장 등 추가 기소

광주지검, 사건 내용 공개 결정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7일 광주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 부시장과 운영될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일부 공무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상급자인 정 부시장 등과 공

모해 최종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이정상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국장은 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부시장과 이 전 국장 등은 잘못된 최초 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검찰청이 사건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려면 각 검찰청 산하 공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심의 결과에 따라 8일 오후 2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탱크 센서 고장 나 밤새 '물벼락'

○..해남 한 아파트 물탱크의 센서가 고장나면 밤새 700t이 넘는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쏟아져 차량 수십대가 물벼락.

○..7일 해남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해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됐다.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결과 밤 사이 물탱크 저장 센서가 고장나 700여t의 물이 주차장으로 흘러들면서 주차 차량 39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

○..해남군 관계자는 "물의 양을 제어하는 센서가 고장나는 바람에 상수도관에서 물탱크로 물이 계속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탱크 저장 센서를 수리할 때까지 해당 아파트로 가는 상수도관을 막아두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